

#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2016. 12. 28.  
개정 2018. 2. 1.  
개정 2020. 11. 1.  
개정 2022. 3. 24.  
개정 2022. 10. 4.  
개정 2024. 4. 1.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구성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자)에게 적용되며, 센터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예방지침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원장의 책무)

-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센터의 원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시청)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고충상담창구)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센터 성고충  
위원회 담당자 소속 부서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센터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센터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 별지 제2호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 별지 제9호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의 2(사이버신고센터)

-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센터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 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 ① 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⑦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 ① 원장은 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② 원장과 센터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센터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제11조(조사)

-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③ 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표 노동조합 추천자 1명 및 센터 추천자 1명 이상,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를 3명 이상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실 직원(성고충위원회 담당자)으로 한다.
-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고충상담기구(고충상담원, 간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원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원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징계)

-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애제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강령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신청 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 중지 [ ]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상기의 사건처리를 위한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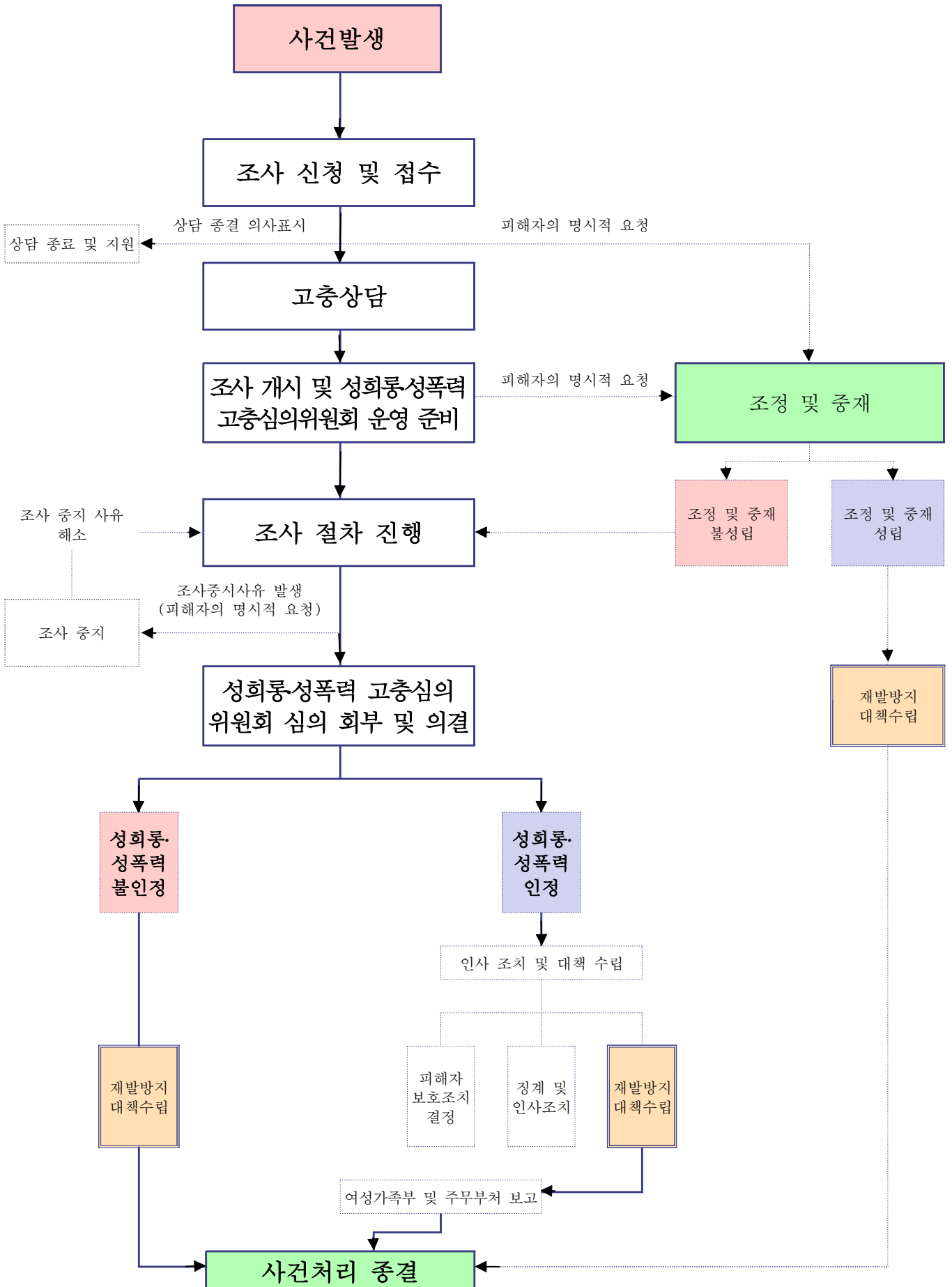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원장 귀하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접수 및 사건이송결과회신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처리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3개월)**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신고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재 소속, 사건발생 당시 소속,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연락처, 피신고인 성명, 성별, 연령대, 현재 소속, 사건발생 당시 소속, 직장주소, 연락처,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② 민감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접수 및 사건이송결과회신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처리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3개월)**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피해사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원장 귀하